



“더위는 힘들어”... 제비들의 목욕 폭염 날씨를 보인 19일 제주시 조천읍 남생이못에 서 제비들이 연신 목욕을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 농산물해상운송비 정부 지원 난항

도서지역 농산물물류비 부담경감방안 용역 마무리
‘해상물류비 국비 직접 지원 신중 검토 필요’ 결론
“내륙지역 농산물 수취가격 하락시킬 수 있는 우려”

제주 농산물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이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관련 연구용역 결과 해상물류비에 대한 국비 직접 지원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농산물해상운송비를 직접 지원하는 대신 간접 지원 사업으로 제주산 농산물 통합물류 체계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20년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 타당성 확보를 위해 ‘도서지역 농산물 물류비 부담경감방안 실증연구용역’에 착수했다. 농식품부 주관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이 실시한 연구용역은 실증사업기간 약 50일

을 포함해 지난해 12월 31일 최종 종료됐다.

용역내용은 물류비 지원 효과분석, 물류비 부담 경감방안 및 실증 연구 등이다. 연구용역은 2020년 20대 국회에서 정부 예산에 용역비가 반영되면서 실시했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서는 직접 지원 방식과 간접 지원의 두 가지 방식이 제시됐다. 하지만 직접 지원 방식의 경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결과보고서에서 “해상물류비에 대한 국비 직접 지원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도서지역 농산물의 생산량이 상승, 소비지 가격 하락 효과가 있으나, 내륙지역 농산물 생산자의 수취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단, 도서지역 생산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품목에 한해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간접지원 형태인 도서지역 통합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 지원은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통합물류 거점 활용 시 농가수취가격이 증대하고 거리와 시간 단축 효과가 발생한다”며 “또 수도권 출하 분산을 통한 가격지지 효과 및 직거래 수요처 확보가 용이하다”고 분석했다.

해상운송비 지원은 제주 농업계의 숙원 사업으로 제주도와 국회의

정부에 예산 반영을 수년째 요구해 오고 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가까스로 연구용역비가 정부 예산에 반영돼 실증사업까지 할 수 있었지만 정부의 직접 지원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 의견이 제시됨으로써 정부 설득이 더 어려워진 셈이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도는 2023년 정부 예산안에 제주산 농산물 통합물류 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국비 19억원 지원을 건의했고 이 중 부처에는 10억원이 반영됐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사업효과 및 필요성은 인정되나, 도서지역만 지원할 경우 산간 오지와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수혜지역과 소비자 혜택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서 간접 지원 방식인 통합물류 체계 구축도 정부 절충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서울=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위원 집단사퇴’도 인권위원회 행보 주목

제주도, 제4기 인권위 위원 공모... “전문가 선발을”
기능 재정비 등 제도 개선 이어질 수 있을 지 관심

도민들의 인권보장 관련 정책을 다루는 제주도 인권위원회가 최근 위원 집단 사퇴 등 내용을 겪은 가운데, 논란 이후 기능 재정비 등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8일 ‘제4기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원 공개모집’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제주인권위원회는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과 인권침해 예방,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

의·자문하는 기구다. 제주도 인권증진 조례에 따라 설립된 이래로 2016년 1기가 위촉됐다. 3기 인권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부로 임기가 종료됐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인권 침해 관련 진정 건에 대해 제주도가 위원회 의견을 듣는 절차를 생략했다며 반발, 동반 사퇴했다. 위원 15명 가운데 6명이 사퇴서를 냈다.

사퇴 배경에는 도 출자출연기관에 근무했던 도민의 직장 내 인권 침해 관련 진정 사안이 연관됐는

데, 인권위원들은 제주도가 사건에 관한 사안에 대해 위원회와 협의 없이 ‘조사 불가’ 통보를 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반면 제주도는 인권위원회가 조례 상 ‘심의’ 기구가 아닌 ‘자문’ 기구라는 해석을 명확히 했다. 당시 도는 “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구제기관이 아니다”라며 “조례에 따라 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피해 규제 심의 규정이 있더라도 조사권이 없는 인권부서 또는 인권위가 구체적인 사건을 심의하고 권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인권위원들은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 감사 요청과 함께,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도 인권위원

회 독립성 강화 등을 촉구했다. 다만 이 사안에 대해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 청구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인권단체 관계자는 “지난 논란에서 핵심은 행정과 인권위원회의 협치와 거버넌싱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이라며 “자문·심의 기능 등을 두고 법적으로 나누기보다는, 협치에 기반한 행정행위를 통해 제주사회에 인권적 관점으로 의견 표명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4기 인권위원회 위원은 제주도 인권조례에 명시된 대로 실제 인권적 감수성이 있는 각 분야 전문가가 선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다혜기자

제주4·3중앙위원회 20일 첫 제주 회의

한덕수 국무총리 등 참석

정부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이하 제주4·3중앙위원회)가 발족 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제주에서 회의를 연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4·3중앙위원회는 20일 오후 2시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회의를 열

어 제주4·3 유족에 대한 추가 결정을 할 예정이다.

20일 회의에는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행안부·기재부 차관, 법제처장, 제주도지사 및 민간위원 등 21명이 참석한다.

제주4·3중앙위원회 위원들은 회의 이후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해 참배할 예정이다.

강다혜기자

제주 코로나19 신규 1466
잠정집계 19일 누계 25만1292
<17시 기준>

2022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국제트레킹 개최를 축하합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제주여행!
(주)유한고속관광이
고객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통학버스(등·하교)/현장학습/수학여행
오름친목/결혼수송(전세버스 100대 보유)

http://www.yeuhangosog.com

(주) 유한고속관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377
TEL.724-9595, 0995 FAX.724-4411